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9.8.(화) 9월 2주차 (제26-49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동향 분석과 통상정책 관련 논의 ····· 2
• (관세) 캐나다, 200억 달러 규모 美 제품에 15~50% 보복관세 시행 ····· 5

미국 경제통상 동향

• (입법) 美 하원, AI·반도체·자동차 분야 경쟁력·공급망 강화 법안 추진 ····· 8
• (관세) 美 민주당, '트럼프 관세 폐지법' 발의…캐나다·강제노동 관세 폐지 추진 ····· 9
• (통상) 무역법 122조 관세 항소심서 수입업체·주정부, 원심 유지 요청 ····· 9
• (무역) 트럼프, "금리 인하 없으면 대미 흑자국과 무역 중단" 선언 ····· 10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의회) 인공지능, 관세 관련 입법 2건 ····· 11
• (행사) Peterson 국제경제연구소 행사 1건 ····· 11

이 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2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13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9.10(목)	• 9월 첫째주 주간 실업급여 청구(Weekly Jobless Claims)
9.11(금)	•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 발표
9.15(화)	•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U.S.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eting)
9.16(수)	• 미 연준 금리결정(U.S. interest rate decision)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동향 분석과 통상정책 관련 논의

- 11.3 중간선거 본선 국면 본격화, 상·하원 다수당 구도를 둘러싼 분석 집중
-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생활비·경제에 대한 인식이 주요 변수로 부각
- 캐나다의 대미관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미국의 수출품(약 200억 달러 상당) 중 약 70억 달러가 상원 경합주에서 발생, 관세·통상정책이 지역 선거 쟁점으로 부상

1. 개 요

□ **예비선거 마무리 국면 진입,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환경의 주요 변수로 거론**

- **3월 텍사스·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진행된 예비선거가 9월 델라웨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며, 노동절 주간을 계기로 본선 국면이 개시**

- 현지 언론은 예비선거 결과와 각종 여론조사를 근거로 양당의 유불리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으나, 상·하원 다수당 전망은 기관별로 상이

* (하원) 민주당의 다수당 확보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는 평가(NPR, 9.8)

** (상원)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도이나 아이오와·텍사스(Cook Political Report, 8.20)와 미시간(Inside Elections, 8.18)이 '경합'으로 하향 조정되며 예측이 유동적

- 물가·연료비 등 생활비 부담이 유권자의 최우선 관심사로 지목되는 가운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선거 환경을 좌우할 변수로 거론

-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3~38% 수준 기록**

- FT·Focaldata 조사(8.28~9.1, 등록유권자 1,914명, 오차 ±2.6%p)에서 지지율은 33%로 5월 추적조사 개시 이후 최저치를 기록,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72%로 하락

-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개인 재정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했으며, 경제·생활비와 통상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지목

- Reuters/Ipsos 조사에서도 등록유권자의 47%가 생활비를 중간선거 투표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등 경제·물가 문제가 선거의 핵심 관심사로 부각

2. 상 세

□ Politico Analysis, 중간선거 핵심 쟁점으로 관세·통상정책 주목

- **행정부는 관세정책의 제조업·무역 성과 강조, 유권자 여론은 부정적 평가 지속**

- 행정부는 80개국 이상과 철강·알루미늄·목재 등 주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제조업 고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물가 영향을 정책 성과로 제시

- 다만 The Economist·YouGov의 8월 조사에서 미국인의 64%가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했으며, 특정 정당 선호가 없는 무당층에서는 반대 비율이 75%로 집계

- 행정부는 비료·일부 농기계와 커피·파인애플 등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Politico는 일부 조치가 관세 발효 이후 시행돼 기업 부담이 선행됐다고 평가

- **농업 부문에서는 수출시장 불확실성과 투입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관세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대**

- 대중국 수출이 위축된 대두 생산자 등이 관세정책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퍼듀대 조사에서는 농업 생산자 심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노스다코타주립대 분석에 따르면 농업 투입재 수입업체는 전년 약 1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담했으며, 유가·비료가격 상승도 생산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

- **미국·캐나다 관세 갈등의 영향이 일부 상원 경합주 지역 선거 이슈로 확산**

- 미국의 캐나다산 약 2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에 대응해 캐나다도 9월 8일 미국산 약 2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15~50%의 대응관세를 시행

- 대응관세 대상은 미국의 대캐나다 상품수출 중 약 5%이나, 오하이오·메인·펜실베이니아·버지니아에서는 대캐나다 수출의 10% 이상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

- 특히 캐나다 보복관세 대상 미국산 수출품(약 200억 달러) 중 약 70억 달러가 상원 경합주에서 발생하며, 미시간은 약 13억 달러가 대상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철강 소재로 분석

3. 현지 반응 및 관전 포인트

□ **노동절 이후 양당의 경합주 공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관세·생활비 문제가 지역별 선거 쟁점으로 부상**

- **양당은 노동절 주간을 계기로 본선 유세를 확대하고 경제·생활비 문제를 주요 선거 의제로 부각**

  - Washington Post/AP는 메인·위스콘신 등 주요 경합지역 후보들이 노동절 행사와 노조 행사 등을 중심으로 유세를 확대하고 있으며, 식품·연료 가격 등 생활비 문제가 유권자 관심사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

- **캐나다와의 통상갈등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관세정책을 둘러싼 지역별 입장 차이도 나타남.**

  - POLITICO는 메인·뉴햄프셔 등 일부 공화당 상원 후보들도 대캐나다 관세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관세 부담이 경합주의 제조업·농업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

  - 통상 측면에서는 관세 부담이 집중된 주가 상원 다수당을 결정하는 구도인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관세정책 운용에 대한 정치적 여건이 변화할 소지가 있다는 평가

〈향후 주요 일정 및 관전 포인트〉

일정	주요 경선 주(州)	관전 포인트
9월 8일	뉴햄프셔 예비선거	• 캐나다 대응관세 발효일(9.8)과 중첩, 관세 영향권 주의 여당 후보 기조 확인
9월 9~15일	로드아일랜드(9.9), 델라웨어(9.15) 예비선거	• 2026년 예비선거 일정 종료, 전국 본선 대결 구도 최종 확정
9~10월	우편·사전투표 개시	• 노스캐롤라이나 9.4 우편투표 발송 개시, 주별 사전투표 순차 시행
10월	경합지 유세 집중	• 대통령·양당 지도부의 주요 상·하원 경합지역 유세 확대, 관세 쟁점 지역 방문 및 관련 메시지 주목
11월 3일	본선 (General Election)	• 하원 435석·상원 35석(특별선거 2석 포함)·주지사 36개 주 동시 선출, 제120대 의회 구성 확정

[자료: 폴리티코,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 종합]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폴리티코(9.3), FT(9.6), WP(9.7)등 현지 언론 및 자료 종합

(관세) 캐나다, 200억 달러 규모 美 제품에 15~50% 보복관세 시행

- 캐나다, 미국산 오토바이·소비재 등 수백 개 품목에 15~50% 보복관세 부과(9.8)
-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응 관세 부과
- 미국의 추가 관세·수입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미 공급망 및 통상 불확실성 확대 전망

1. 개요

□ 캐나다, 미국의 對캐나다 관세에 대응, 對美 보복관세 시행(9.8)

• **캐나다는 미국의 對캐나다 관세에 대응해 9.8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5~50% 보복관세를 부과**

- 미국산 철강 일부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으로 인상하고, 오토바이·화장품·치즈 등 다양한 소비재에도 관세 적용
- 이번 조치는 미국이 8.22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50%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 캐나다는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응하는 한편, 양국 간 협상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복관세를 활용

2. 美·캐나다 교역 및 주요 영향

□ 높은 교역 의존도로 보복관세 파급 가능성 상존

• **캐나다는 미국의 '25년 기준 두 번째로 큰 상품·서비스 교역 상대국이며, 캐나다 상품 수출의 72%가 미국으로 향하는 등, 對美 의존도가 높은 구조**

- 미국은 캐나다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양국은 에너지·자동차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통합된 공급망을 형성
- 캐나다산 원유는 '25년 미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64%를 차지해 에너지 분야에서도 높은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

- 미국은 '25년 기준 캐나다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공급국(4,880억 달러)이며, 캐나다도 미국의 3위 외국인직접투자(FDI) 공급국(7,470억 달러)으로 양국 간 투자 연계가 높은 수준

3. 주요 통상정책

□ 철강·자동차·유제품 등 구조적 통상 갈등 지속

• 이번 보복관세의 배경에는 미국의 對캐나다 관세 조치와 함께 양국 간 기존 통상 쟁점 존재

- 미국은 캐나다의 유제품 공급 관리 및 관세 할당제(TRQ) 운영, 주류 판매·유통 제한, 자동차 관련 정책 등을 對美 차별 조치로 문제 제기
- 자동차 분야에서는 USMCA 역내 콘텐츠 및 원산지 기준을 둘러싼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간 이견도 지속
- 철강·알루미늄 뿐만 아니라 목재·자동차 등 캐나다 주요 산업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이어지면서 통상 갈등의 적용 범위가 확대

4. 현지 반응 및 향후 전망

□ 미국의 추가 대응 여부가 핵심 변수

• 미국은 캐나다의 보복관세에 대응한 추가 관세 및 수입제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양국 간 통상 갈등 확대 여부가 주요 변수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와 양국 간 교역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까지 언급
-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Bombardier에 대한 미국 내 판매 제한 가능성도 제기

□ 관세 장기화 시 북미 공급망 부담 확대

• 자동차·에너지 등 북미 공급망의 통합도가 높아 관세 장기화 시 비용·불확실성 확대 우려

- 자동차 분야는 역내 콘텐츠 기준, 원산지 규정 및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공급망 및 투자 결정에 부담으로 적용할 가능성
- 에너지 분야에서도 캐나다가 미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 공급국인 만큼, 관세 확대 시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확대 전망
- '26 USMCA 공동 검토에서 관세 및 기존 통상 쟁점이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북미 무역환경이 달라질 가능성 존재

□ 현지 매체·전문가, 보복관세 장기화 및 추가 확전에 우려

•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보복관세를 미국의 추가 대응에 따른 갈등 확대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협상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 캐나다 측 통상 전문가들은 보복관세가 무역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무역전쟁을 종식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분석
- 미국 통상업계는 상호 보복관세가 양국 기업·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무역장벽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
- 캐나다 내 對美 통상 대응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는 가운데, 관세 장기화 시 對美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부담 확대가 우려
- Oxford Economics는 관세 장기화 시 '27년 캐나다 GDP 0.3%P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는 약 0.3%P 상승할 것으로 전망

〈캐나다 對美 보복관세 적용 현황〉

관세율	주요 대상
50%	철강·알루미늄, 의류, 합판·목재 일부, 우유·크림·꿀, 화장품, 오토바이 등
25%	치즈, 카펫, 제재목, 가전제품 등
15%	전자제품, 일부 공구류 등
기존 관세 유지	자동차 등 기존 보복관세 대상

[자료] 캐나다 재무부

▪ 작성자 | 워싱턴 D.C.무역관 김기범

▪ 자료원 | 캐나다 재무부(8.25), 의회조사국(8.28), NYT(9.8), 블룸버그(9.8)

미국 경제통상 동향

(입법) 美 하원, AI·반도체·자동차 분야 경쟁력·공급망 강화 법안 추진

- **(개요) 美 하원 에너지·상무위 소위, 첨단산업 관련 법안 3건 전체위원회 회부**

- 하원 에너지·상무위 소위는 미국산 개방형 AI 모델의 해외 활용 지원, 중국산 반도체 장비 구매 제한 및 자동차 업계의 해외 투자·기술협력 조사 관련 법안 3건 의결(9.1)

- **(상세) 첨단기술의 해외 활용 촉진 및 핵심 산업의 대외 의존·협력 관리 강화**

- **(AI)** 오픈소스 AI 리더십 법안(Open-Source AI Leadership Act): 상무부가 미국산 개방형 AI 모델의 도입·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추진하며, 중국 등 우려국의 AI 모델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 **(반도체)** 칩 장비 품질·유용성·무결성 보호 법안(Chip Equipment Quality, Usefulness, and Integrity Protection Act): 반도체법 지원기업의 우려국산 반도체 제조장비 구매를 제한해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

- **(자동차)** 자동차 국가·경제안보 법안(Automotive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Act): 상무부가 미 자동차·부품업계와 중국 등 우려국 간 투자·지분·기술협력 관계를 조사하고, 국가안보·산업경쟁력·지식재산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

- **(반응) 의회 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공감대에도 AI 법안 상무부 권한에 이견**

- 공화당은 중국 기업의 개방형 AI 모델 영향력 확대와 중국산 반도체 장비 의존에 따른 산업·경제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입법 필요성 강조

- 민주당 일부는 미국산 개방형 AI 생태계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상무장관의 포괄적 권한 부여와 연방 AI 규제체계의 불확실성에 우려 표명

▪ 자료원 | 인사이드(9.1)

(관세) 美 민주당, '트럼프 관세 폐지법' 발의…캐나다·강제노동 관세 폐지 추진

• **(개요) 美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주도로 '트럼프 관세 폐지법' 공동 발의**

-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상원의원 12명(와이든·캔트웰·워너·웰치 등) 및 앵거스 킹(무소속)과 공동으로 'End Trump's Tariff Tax Act' 발의(9.1)

- 슈머는 관세發 가계 부담 가중과 인플레이션 지속을 법안 발의 근거*로 제시

* 1년간 관세로 가구당 평균 약 2,000달러 부담, 비용의 96%가 소비자에게 전가 주장

• **(상세) 對캐나다, 강제노동 관세 무효화·자동환급 및 근거 조항 폐지 규정**

- **(관세 무효화)** ①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방지 미흡 60개국 대상 관세(10~12.5%, 7.23 발효), ② 관세법 제338조 對캐나다 관세*(50%, 8.22 발효) 무효화

* 민주당 슈나이더·웰치·길리브랜드 의원, 제338조 폐지·환급 법안('BAD DEAL Act') 별도 발의(8.27)

- **(관세환급)**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시행 후 30일 내 이자 포함 자동환급, ▸중소기업 우선 환급, ▸서류제출 불필요 ▸이미 청산된 수입건도 관세 전 세율로 재청산

- **(근거 조항 폐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제122조, 1930년 관세법 제338조의 조항 자체를 폐지

• **(전망)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發 '생활비 상승'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현지언론은 해석, 공화당 다수 의회 구도·트럼프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으로 입법 가능성은 낮을것으로 전망**

▪ 자료원	인사이드(9.1), 인사이드(8.28)

(통상) 무역법 122조 관세 항소심서 수입업체·주정부, 원심 유지 요청

• **민간 수입업체와 주정부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국제무역법원의 1심 판결 유지를 요청**

- 트럼프 대통령은 '26.2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무효화하자, 당일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대부분의 수입품에 150일간 10% 관세를 부과

- 국제무역법원은 '26.5월 일반적인 무역적자를 122조 상 '중대하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로 볼 수 없다며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

• **항소심에서는 무역·경상수지 적자가 122조상 '중대하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측 해석이 대립**

- 수입업체와 주정부는 '국제수지 적자'가 고정환율제에서 금·외환 등 공식 준비자산의 유출 위험을 뜻하며, 122조는 이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한시적 관세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

- 반면 무역·경상수지 적자는 상품·서비스 교역 등 민간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으로, 국가 준비자산의 유출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

- 법무부는 대통령이 경상수지 등을 토대로 국제수지 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수입업체와 주정부는 이 같은 해석이 사실상 모든 무역적자를 관세 부과 근거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

-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10% 관세가 무효화되고, 150일간 정부가 징수한 관세의 환급 가능성도 제기

▪ 자료원	인사이드(9.8), 주정부 측 항소심 서면(8.31)

(무역) 트럼프, "금리 인하 없으면 대미 흑자국과 무역 중단" 선언

• **(개요) 트럼프 대통령, 9.4(금)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준(Fed)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선언**

- 예상보다 양호한 고용지표*를 근거로 미국의 경제·신용 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

* 美 노동부 8월 고용보고서 : 8월 신규 일자리 16.2만 개 증가, 실업률 4.1% 유지(9.4)

• **(개요) 관세보다 교역 중단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무역 및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제시**

- 대법원은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효화했으며, 트럼프는

해당 판결이 대통령의 수입 금지·금수조치·시장 접근 제한 권한은 인정했다고 주장

- 신임 연준 의장 케빈 워시와 연준 인사들에게 "현명해지고 애국자가 되라"며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등, 통화정책과 대미 무역흑자 문제를 직접 연계한 점이 이례적

• **(반응) 연준의 독립성과 통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교역 중단 대상국과 시행 시기·방식이 불분명한 가운데, 실제 조치 시 공급망 교란과 물가 상승, 금융시장 불안 등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 자료원	인사이드(9.4), 노동부 8월 고용보고서(9.4)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인공지능 (8.27)	H.R.10152 (8.27)	Gabe Evans (공)	〈미국 오픈소스 인공지능 선도법 (Open-Source AI Leadership Act)〉 ▪ 미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산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의 도입·활용을 지원하도록 지시, "적격 외국 파트너"를 북한·중국·러시아·이란을 제외한 국가로 정의하는 법안
관세 (9.02)	H.R.10229 ((9.02)	Shomari Figures (민)	〈관세 영향 농가 지원법 (Tariff Impacted Farmers Support Act)〉 ▪ 대미 쇠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통령 포고 11059호를 무효화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관세·관세율·기타 부과금의 인하를 금지하는 법안

* 9월 8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Peterson	9/17(목) 9:00 am	〈The state of the transatlantic security partnership〉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발언으로 미·NATO·EU 간 긴장이 심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대상 공격적 행보로 안보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손상 복구 가능성과 조건, NATO·EU·영국·유럽 내 역학 변화, 그리고 80년간의 대서양 안보 파트너십의 과거 사례와 비교·논의	링크

* 9월 8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Amazon Cargo Plane Overshoots Runway in Miami, Killing Five People (아마존 화물기 마이애미공항 활주로 이탈, 5명 사망)
	아마존 화물기가 마이애미 국제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인근 차량들과 충돌하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위중한 것으로 확인돼
The Washington Post	Tesla's Cybercab robotaxi has hit the streets. Regulators have questions. (테슬라 무인 '사이버캡' 도로 위로…美 당국은 즉각 조사)
	테슬라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2인승 자율주행차 '사이버캡'을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했으나, 미 연방 규제당국은 차량의 안전기준 충족 인증 방식에 대한 조사에 착수
The New York Times	Near the Border, Americans Fear Losing Ties With Canadians (미·캐나다 통상갈등, 접경지역 경제·교류까지 흔들)
	캐나다가 미국산 약 650개 품목에 15~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미국 접경지역에서는 기업 비용 상승과 캐나다인 방문 감소가 나타나며 무역갈등의 여파가 지역경제와 양국 간 교류로 확산
USA Today	Labor Day weekend gas prices have never been higher (美 노동절 연휴 휘발유값 사상 최고…갤런당 4.15달러)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노동절 연휴인 9월 6일 갤런당 4.15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란 전쟁과 러시아 정유시설 가동 차질에 따른 글로벌 공급 불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Reuters	Trump administration renews Supreme Court bid to limit mail-in voting (중간선거 앞두고 우편투표 공방…트럼프 행정부, 대법원에 긴급 요청)
	트럼프 행정부는 유권자 명단 제출과 투표용지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한 우편투표 규칙이 연방법원에 의해 중단되자, 11월 중간선거 전 시행을 허용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기

* 미국 동부 시간 9월 8일 15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29	미국의 AI 기반 관세회피·우회수출 단속 강화와 우리 기업 시사점	2026.8월
US26-28	美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조치 및 소송 동향	2026.8월
US26-27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온쇼어링·자국산업 보호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6.8월
US26-26	美 방산시장 진출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2026.7월
US26-25	美 USTR「2026 USMCA 자동차 교역 보고서」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7월
US26-24	미국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정책 추진 동향 및 현지 반응	2026.7월
US26-23	美 BIS, 커넥티드 차량 '적격 공급자 목록' 일반 허가제 분석 및 시사점	2026.7월
US26-22	美 반도체 232조 관세 추진 동향 및 현지 업계·기관 평가	2026.7월
US26-21	美 AI 보안 검증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20	트럼프 대통령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 시사점	2026.6월
US26-19	OECD「Steel outlook 2026」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18	미국 중간선거 5월 경선 결과 및 향후 주요 일정	2026.6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7.30		
2026.5.28.		

문의	이메일	전화
	mkpark@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